

여경총 도지회 내일 강원여성경영자대회 개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 (회장:김영숙)는 15일 오후 5시30분 춘천 디아펠리즈에서 2015 강원여성경영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유공자에 대해 지사, 한국여경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의 기관 표창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

△도지사 표창=필주란 이원사슴목장 대표, 최미경 천연애공방 대표, 배동원 (주)동원토건 대표, 송문숙 명현종합건설(주) 대표 △춘천시장 표창=윤나경 봄봄도가 대표, 원미경 도서출판 산책 대표, 차국열 (주)교성 대표, △원주시장 표창=남미희 (주)우덕리서치엔컨설팅 대표, 주경혜 씨엠에프 △강릉시장 표창=김윤영 아낙스킨케어 대표, 정혜영 정혜영Cook 대표 △철원군수 표창=김영미 행복을주는집 대표, 이영주 한탄강레프팅 대표 △춘천세무서장상=김미애 미애드 대표, 양귀남 오희춘천중앙

지사 대표 △원주세무서장상=송미희 (주)현대메디텍 대표 △강릉세무서장상=이숙인 강릉유명한한과 대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상=김근숙 디지털paper 대표, 김순매 대관령상회 대표, 선미숙 비주짱 대표, 김정현 고래밥 대표 △강원지방조달청장상=김하숙 (주)유진포장건설 대표, 전순란 (주)청송 대표, 이은숙 (주)한중기업 대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상=양홍춘 (주)백향우드 대표, 심애리 젠택 대표, 최금정 (주)커피커피 대표 △중소기업중앙회장상=서용순 한울디자인 대표, 임정하 융합환경기술연구원 대표, 안경미 낙원기업 (주) 대표 △한국여경총협회장상=신애경 (주)제이비에어 대표, 백종수 원주시 부시장, 최규선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양희봉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도협 회장상=박재희 (주)월드케미칼 대표, 김태희 (주)라눅스 대표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기재부 심의 독점으로 '협의 지연→사업기간 연장' 악순환... 담당자 전문성도 도마에

발주기관 등과 업무 분담... 협의 대상도 조정 필요

NEWS &

경기활성화 발목잡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회와 경제부처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악성 중앙' 수준으로 악화됐다. 과거엔 협의 기간이 길어야 6개월~1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1년을 훌쩍 넘긴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총사업비 협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지만 기재부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건축 2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사업기관이 총사업비를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막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예산 심의를 독점하려는 기재부의 조직 이기주의가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상사업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된 국토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409건, 153조원 규모다. 반면 국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협의 실무를 맡고 있는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 10명 정도다. 주 업무가 예산 편성이다 보니 총사업비 협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년 예산 시즌 전후로 총사업비 협의 통보가 물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가 부처 내 총사업비 심의 기간을 평균 20일 이상 단축했지만 기재부로 넘어가면 '합충차사'다.

총사업비 협의 담당자들의 전문성 문제는 매년 논란거리다. 대부분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 예산 담당자들이 과연

KDI "총사업비 1000억 이상 국고 500억 이상으로 올려야" 조정내역 공개방안도 검토를

건설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학예산만 다루던 직원이 와서 타일공사 예산을 검토하는 걸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실무진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관련 전문가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포드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예산

을 아끼려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미래 예산 증액의 요인이 되는 것은 정말 아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은 부처 위에 군림하는 '갑(甲) 중의 갑 공무원'이라며 "전화로 10분 이면 협의가 끝날 내용도 2~3일 전에 약속 잡고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KDI는 부처의 자율 조정 역할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저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얘기다. 총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 부처나 발주기관이 맡고, 기재부는 장기를 살려 예산 분야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총사업비 대상 범위도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처럼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총사업비 조정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1년 넘게 협의한 결과를 세부 조정내역 없이 총액만 통보하는 방식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용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깎고 보자"식의 사업비 삭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업비 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경제성과 전문성 문제 등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예산 이월·불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척기간’ 도입, 시장불안 해소해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유효기간(제척기간)을 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적정한' 제척기간이 몇 년에나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남은 입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부가 적정 제척기간으로 제시한 '5년'이 입법과정에서 '7년'으로 늘어나며 제척기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입법조사처는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척기간의 개선방안"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해 그 기

입법조사처,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사 앞두고 제척 강조 당초 '5년→7년'으로 늘어 취지 훼손 논란... 단축 필요

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건설사는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수주활동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업체가 부정당행위 후 수년이 지나 거액의 비용을 들여 공공입찰에 참여했는데, 과거 행위로 갑자기 입찰제한을 받는 건 가혹하고 타법률과도 형평여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시장불안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몇 년이 적당할지는 다소 애들러 분석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년',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시효인 '2년', '형사소송법' 등의 공소시효인 '7년'까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로는 발주제한 처분 통지 후 12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있는 '미국'을 소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이고, 통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만큼 적당한 제척기간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는 건 조신스럽다"면서도 "담합 행위를 적발한 때부터 제척기간을 시작하는 등으로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5년보다 짧아져도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입찰제한 제척기간 도입을 추진한 데는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면서 "현재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 게 시장 불확실성 감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여기는 만큼, 남은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될 수는 있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여야 논의를 거치며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었다. 야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조사와 과징금 처분만 최대 3년이 소요되고, 입찰제한 절차를 밟는 데 2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5년의 제척기간은 짧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상임위원 기획재정부위원회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석기자 ysis@

【 2015.12.14(월) 건설경제 】

강건연, 원주 종합사회복지관에 300만원 전달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11일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